

미 수는 재인가 관련 진행현황 및 전망

I. 재인가 진행현황	1
II. 재인가 지연 사유	2
III. 주요 쟁점	3
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	5

확인 : 팀	장 이윤관 (6255-5710) lyk@koreaexim.go.kr
작성 : 선입조사역 변광현 (3779-6675) bytal@koreaexim.go.kr	

I. 재인가 진행현황

- 미 수은은 미 의회의 재인가 법안 미처리로 설립후 최초로 '15.6.30자로 재인가 기한이 만료됨
 - '12.5월말 기한만료시 미 수은의 운영중단을 주장하는 공화당 보수파의 반발로 '14.9월말까지 연장되고 다시 '15.6월말까지 임시 연장된 바 있음
 - 결국, 공화당 보수파의 비협조로 재인가 법안 처리가 좌절되며 재인가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발생
- 미 수은은 기존 승인 여신 및 보험의 실행 및 사후관리에 제한하여 운영중이며, 신규 승인은 중단된 상태
 - '15.6월말 기준 여신 및 보험 잔액은 U\$1,070억, 미집행액은 U\$250억임.
 - '15.9월말까지 필요한 자금(미집행승인액, 운영예산 등)은 확보된 상태임.
- 당초 7월말 재인가를 예상하였으나, 상원을 통과('15.7.26)한 재인가 법안이 하원의 상정 거부('15.7.27)로 인해 7월말 재인가 실패
 -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*에 첨부되어 7.26자로 상원을 통과하였으나, 하원의 법안 상정 반대로 재인가 불발
 - *미국내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 관련 '고속도로 펀드 법안'
 - 하원은 별도의 연방고속도로 법안(미 수은 재인가법안 미포함)을 가결하여 상원으로 송부하였고, 동 법안이 의결('15.7.30)됨

<미 의회 법률안 의결 및 발효 절차>

[상원 법안 의결 ↔ 하원 법안 의결]* ⇒ 대통령 서명 ⇒ 발효

* 동일 사안에 대해 양원은 별개의 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, 양원 모두의 의결을 거친 법안만이 대통령에게 송부됨. 따라서, 양원간 이견발생시 조정을 통해 통일된 수정법안을 만들어 양원 모두 의결하게 됨.

<7.26자 상원통과 미 수은 재인가 법안 주요내용>

- 재인가기한 : '19. 9. 30
- 여신잔액한도(exposure cap) 감액 : U\$1,400억 → U\$1,350억
* '14회계년도('14.9.30) 기준, 여신 및 보험 잔액 U\$1,120억
-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: 20% → 25%
- 지급준비율 : 5% 이상 유지
- 매분기 결산 결과 연체율 2% 이상 도달시, 여신잔액 동결
- 재보험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
- 윤리 부서(Office of Ethics) 설치 및 최고윤리이사(Chief Ethics officer) 임명
- ☞ '15.9월중 논의될 재인가 법안의 기초가 될 가능성 높음

II. 재인가 지연 사유

- 美 공화당내 Tea-Party 등 강경 보수파들이 재인가를 반대하고 있으며, 이들은 당내 다수는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 당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
- 공화당내 강경 보수파는 사상 초유의 미 수은 운영기한 만료를 시장경제 및 작은 정부주의의 승리로 인식하는 등 상징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징표로 선전하고 있음
- 공화당 당지도부와 대통령후보군 대부분(2명* 제외)이 미 수은의 재인가 불허를 지지하고 있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

* Linsey Graham(남캘리포니아 상원의원), Rick Santorum(前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)

※ 재인가 법안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상원(표결완료) 67명(총 100명중), 하원 248명(총 435명)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의안 상정시 통과는 확실시됨

- 또한, 차기 미 대선 관련, 선거법 개정으로 수퍼팩* 등을 활용하여 선거자금 모금한도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‘Heritage Action’, ‘Freedom Partner’ 등 강경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했기 때문임

* super PAC. ‘특별정치활동위원회’로 불리는 민간단체. 개인의 기부 액수에 제한이 없어 펀드와 미디어회사, 거부들이 이해관계로 거액 기부

- 미 수은의 최근 두 번의 재인가시 기존의 4~5년 연장이 아닌 단기 연장*에 그쳤고, 반대의견의 증가도 뚜렷해지고 있음

*’12.5월(2년 4개월 연장), ’14.9월(9개월 연장)

III. 주요 쟁점

- 전통적으로 정부의 시장간섭과 기업보조금 논란이었으나, 최근 공화당 보수세력은 시장주의(작은정부론)에 따라 불필요한 정부 기관으로 분류

- 강경 보수세력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*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,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인 NEI정책**의 주요 실행기관인 미 수은의 재인가 반대도 그 일환임

* ’13년 美 연방정부 부분 폐쇄 등

** 국가수출진흥전략(National Export Initiative) : ’09년 발표된 수출진흥 정책으로 ’14년까지 수출규모를 ’09년 수출규모 대비 2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됨. 현재는 ’14년 발표된 2차 계획(NEI NEXT)이 시행중

<재인가 관련 찬성 및 반대 세력>

찬성 세력	반대 세력
미상공회의소(Chamber of Commerce), 제조업자 연합회(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), Boeing, GE, 미 민주당, 백악관 등	Heritage Action, Freedom Partner, Club for Growth 등 보수압력단체 및 미 공화당내 대통령 후보군과 Tea Party 등

□ 백악관과 민주당 등을 비롯한 찬성 세력은 수출공헌도, 일자리창출, 중소기업 지원, 낮은 연체율, 정부 재정건정성 기여 등을 이유로 재인가 주장

- 수출공헌도('14) : U\$275억 지원
- 일자리창출('14) : 164,000개 일자리창출
- 전체 지원건수 대비 중소기업지원건수(3,340여건) 비중('14) : 90%
- 연체율('14) : 0.175%
- 연방정부 앞 환입액('14) : U\$6.75억

<붙임 2. 미 수은 재인가 쟁점사항> 참고

<미 수은의 연방정부 앞 환입 관련>

※ 미 수은은 최근 지속적인 손실*에도 불구하고 '14년 U\$6.75억 환입(최근 20년간 U\$69억)

* 최근 3개년 수익성 추이 : △U\$752백만('12) → △U\$540백만('13) → △U\$526백만('14)

□ 미 수은은 '92년부터 예산 배정시 Federal Credit Reform Act ("FCRA")에 따른 순비용을 추정

○ FCRA에 의하면, 신용 프로그램의 예산 비용(budgetary cost)은 회계연도의 순비용인 추정 보조금비용(estimated subsidy costs)*과 같아야 된다고 규정

* 추정 보조금 비용은 전체 여신기간 동안 대출/보증 등으로 인한 유출현금에서 유입현금을 뺀 현재가치를 의미

□ 회계상 손실에도 불구하고, (현재가치 기준) "유입현금 > 유출현금" 이면 초과분을 재무성에 환입하고, "유출현금 > 유입현금" 이면 부족분을 정부가 예산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

<'15.8.10자 워싱턴 사무소 조사 내용>

IV.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재인가 법안의 7월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, 의회 휴지기(8월)를 감안시 9월말 연방정부 예산안에 첨부되어 재인가 법안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음
 - 미 수은은 '15. 9월까지의 운영자금이 확보된 상태로, 9월에 재인가 되더라도 당분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 - 또한, U\$10백만 이상(기간 1년 이상) 프로젝트 승인시 이사회 5인중 3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나, 현재 3인이 공석인 상황임. 공화당 보수파는 동 이사회 멤버 후보자 지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
 - 다만, 공화당 보수파에서는 재인가 조건으로 향후 일몰조건*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
 - * 인가기한 만료시 기존 여신 사후관리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 여신 만료시 미 수은의 기능 종료
- 예상보다 강한 공화당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9월 재인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
 - 재인가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되거나 또는 연방정부 '16년 예산안에 첨부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
 - '13년 연방정부 부분 폐쇄시의 비판여론으로 인해 공화당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지연시키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재인가 법안이 연간예산안에 첨부될 경우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- 81년 역사의 미 수은 재인가 논란은 '08년 금융위기 이후 ECA의 역할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미국내 정치 상황에 의한 예외적인 현상임
 - 다만, 재인가 논란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 논의의 진행 과정은 ECA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. 끝.

붙임 1

미 수은 재인가 주요 연혁

- '34년 설립된 미 수은은 '45년 재인가 규정 제정 후 81년 동안
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총 16번 재인가된 바 있음.
- '12년 기한만료 도래시 공화당 보수파의 반발로 '14.9월말까지
임시연장되었으며, 이후 '15.6월말까지 단기 재연장됨

- '34. 02.	미국 대통령령 6581에 의거, 워싱턴수출입은행(Export-Import Bank of Washington) 설립
- '45. 07.	수출입은행법(Export-Import Bank Act of 1945) 제정으로 독립국가기관으로 전환 * 4년마다 재인가 받도록 규정
- '92. 10.	상원 구두투표 통과, 하원 통과(찬성 332, 반대 44, 기권 56)
- '97. 11.	상원 만장일치 통과, 하원 구두투표 통과
- '02. 06.	상원 만장일치 통과, 하원 통과(찬성 344, 반대 78, 기권 12)
- '06. 12.	상원 만장일치 통과, 하원 구두투표 통과
- '12. 05.	상원 통과(찬성 78, 반대 20, 기권 2), 하원 통과(찬성 330, 반대 93, 기권 8) * '14. 9. 30까지 임시연장
- '14. 09.	상원 통과(찬성 78, 반대 22), 하원 통과(찬성 319, 반대 108, 기권 4) * '15. 6. 30까지 임시연장

붙임 2

미 수은 재인가 쟁점 사항

① 기업보조금 시비

(재인가 찬성측)

- 미 수은은 이자, 수수료 등 수익을 연방정부에 송금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납세자에 부담을 주지 않음
 - 지난 20년간(1995~2014) 약 U\$69억을 연방정부 앞 송금('14년 U\$6.75억)
- 전세계 약 60개국이 ECA를 활용하여 자국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,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수출기업에게 공평한 기회의 장(a level playing field)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

(재인가 반대측)

- 미 수은의 지원은 기업보조금(Corporate Welfare)으로 정부가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정실자본주의(Crony Capitalism)의 전형임
- 미 수은의 금융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되며 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, 특정 기업만이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

② 대기업 편중 지원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'14년 미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건수 비중은 약 90%이며, 승인금액 비중으로는 약 25%에 달함

(재인가 반대측)

- Boeing, GE 등 정부지원이 필요없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매우 높아,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낮음
- 미 수은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미국 중소기업의 0.5%에 불과

[3] 민간 상업금융 침해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민간 상업금융은 바젤III 등의 영향으로 리스크가 큰 대규모·장기 프로젝트와 정치적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의 수출거래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민간금융을 통한 조달은 한계 존재
- 미 수은의 '14년 美 항공산업 지원비중*이 41%에 달하는 등 미 수은은 항공, 발전 등 전략산업 수출에 크게 기여
- * '14년 美 항공산업에 대한 총 여신지원 U\$205억중 U\$81억 지원

(재인가 반대측)

- 민간 상업금융을 통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므로 수출 및 교역 확대라는 설립 취지는 의미를 상실하였고, 미 수은의 수출지원 비중도 2%가 안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관임

[4] 부실 논란

(재인가 찬성측)

- 부실여신비율이 0.175%에 불과하며, 모든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채택함. 또한 지원 분야와 지역이 다양하고 수출품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위험도가 낮음

(재인가 반대측)

- 고위험 여신으로 인해 국민 세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
- 공정한 회계 결산시, 운영비용과 영업 손실로 인한 비용이 10년간 U\$20억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

5 도덕성 시비

(찬성측 논리)

-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임

(반대측 논리)

- '15.4월 뇌물사건 등 최근 5명의 임직원이 부정·부패에 연루되는 등 부패한 정부기관임
- '15년 4월 미 수은 前직원이 19건의 수출거래와 관련 U\$78,900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

붙임 3

미 수은 개요

구 분	내 용
설 립 연 도	1934년
설 립 목 적	수출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
주 무 부 처	독립 정부기관으로 별도 주무부처는 없으며, 미 의회가 동 기관의 활동 영역, 재인가 여부사항 결정, 자본금 지급, 총괄 감독 업무 등을 수행
주 요 상 품	대출, 보증, 보험
지 원 분 야	수출
감 독 기 관	미 의회, 회계관리국
총 자 산	U\$236억
자 기 자 본 (납입자본)	△U\$10억 (U\$10억)
재정지원비율	100%
재 원	자본금, 차입금 재정출연금
직 원 수	약 450명
'14년 승인실적	U\$205억
연 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34 워싱턴수출입은행 설립 - '45 수출입은행법 제정으로 독립국가기관으로 전환 - '61 해외신용보험협회(Foreign Credit Insurance Association : FCIA)가 설립되어 수출보험업무 실시 - '68 미 의회는 명칭을 미국수출입은행(Export- 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)으로 변경 - '78 경쟁국의 양허성자금 지원에 대응하여 구속성 원조 매칭제도 도입 - '94 프로젝트파이낸스부와 항공기금융부 신설 - '06 은행장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 및 중소기업 전담부서인 중소기업금융부 신설 - '12 Global Credit Express, Renewable Express 도입